

News

금감원장, 은행장 상견례서 대출금리 제동

뉴스1

이복현 금감원장, 은행장들과 취임 후 첫 간담회서 대출금리 인상에 사실상 제동… "은행들의 지나친 이익 추구에 대한 비판 커진다"며 우회적 비판 은행들의 자율 금리 결정을 존중하되 시장 개입은 아니라는 입장… 을 상반기 중 은행 예대금리차 점검 결과를 공시체계와 함께 발표할 계획

인터넷은행 예·적금 금리 경쟁…조기 소진 예감

아시아타임즈

카카오뱅크, 오는 21일부터 예·적금 기본 금리를 최대 0.40%p 인상… 인터넷전문은행 3사의 예·적금 고객 유치전 치열
케이뱅크, 지난 17일부터 연 5%의 적금 특판 실시 중… 토스뱅크도 14일부터 적금 신상품 출시하며 수신 라인업 확대

금리급등에 한계기업 선별 촘촘해져…구조조정 기업 늘어난다

이데일리

정부, 코로나 기간 일부 완화한 신용위험평가 운용을 내실화하기로… 그간 코로나로 인한 일시적 영향 배제하고 기업 평가해와… 앞으로는 이런 과정 없이 그대로 기업 평가 예정
최근 금리 인상기 맞아 영업이익으로 이자 못 갚는 한계기업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부실징후기업 증가 우려… 올해부터는 중소 및 대기업 신용위험평가 각각 이루어질 예정

자영업자 77% 차주별 DSR 영향권…대출 절벽 불가피

뉴스1

금융당국, 다음달부터 DSR 3단계 규제 시행… 총 대출액이 1억원이 넘는 차주 중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 넘기면 추가 대출 불가
작년 4분기 기준으로 개인사업자 대출 받은 사람 총 278만 9,000명… 이중 가계대출까지 가진 사람은 전체 77.8%… 자영업자 상당수가 규제 적용 대상 될 수 있어…

한화생명, 우리금융 지분 전량 매각…3000억 현금화

머니투데이

한화생명, 17일 시간외거래를 통해 3,000억원 규모의 우리금융지주 주식 전량 매각… RBC비율 방어를 위한 결정으로 해석되어…
해당 지분은 대부분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넘어간 것으로 추정… 그러면 외국인 지분율은 사상 처음으로 40% 넘기게 돼… 같은 날 4,0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권도 발행

보험사 대출채권잔액 269.5조..전분기 대비 3.4조 ↑

파이낸셜뉴스

지난 3월말 기준 보험사 대출채권 중 가계대출은 128조 8,000억원으로 전분기 말보다 3,000억원 증가… 기업대출은 140조 5,000억원으로 전분기 말 대비 3조 1,000억원 증가
보험사 대출채권 연체율은 0.18%로 전분기말 대비 0.05%p 증가… 부실채권비율은 0.13%로 전분기말과 동일… 가계대출은 0.14%, 기업대출은 0.12%

금융위, "가상자산 '증권성' 스스로 판단케 할 것"

이데일리

금융위원회,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 판단을 가상자산 발행자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록 가닥 잡고 있어… 경제적 실질에 따라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구분해 규제 체계 마련
업계에서는 모든 가상자산을 살펴보고 증권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 이에 위메이드의 위믹스가 도마 위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

'빚투' 접는 개미들…신용잔액 1년반 만에 최저

한국경제

17일 기준 신용융자 잔액 20조 3,573억원으로 작년 1월 8일 이후 최저치… 1월 증시 폭락하며 3월 2일 20조 8,133억원으로 감소
국내 증시가 연일 폭락하며 제때 돈을 갚지 못한 투자자가 증가한 점도 신용융자 잔액이 줄어든 원인으로 꼽혀…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입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히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